

2023년 새해를 맞아 각계에서 신년회를 갖고 과제와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KNN도 1월 1일 뉴스에서 '희망 2023년'이란 타이틀로 안전한 식수원 확보 문제, 가덕신공항·엑스포 유치 과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변화 움직임을 짚으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1월 동안 공공기관 정원감축 청년피해 우려, 청년 임대주택 전세값 인상 문제, 택시업계 줄도산 문제, 수영강 휴먼브릿지 예산낭비 및 공공기여금 사용 논란, 한국카본 산재사고에 대한 노동부 소극 대응 등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충실히 보도했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

1. 불법폐기물 처리 기획보도

이중 먼저 눈에 띄는 뉴스는 '불법폐기물 실태를 고발한' 기획보도였습니다.

1월 16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매립된 불법폐기물의 실태와 먹튀 등 범죄 유형,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기획시리즈 였는데요

16일 <신음하는 땅, 불법 폐기물에 '황폐화'>에서는 불법 폐기 실태를 소개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이 한해에만 1억9천만톤 가량되고 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중에 많은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곳곳에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에서는 진주시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곳에 팬스를 치고 사업장을 둘러막은 뒤에 그 안에다 폐기물을 버려두고 방치한 현장을 보여주며 전형적인 사례라고 소개했고, 또 김해 삼계 임대아파트 건설 부지에서도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드러나 그 규모를 알기위해 시추 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방대한 양에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땅 속에 매립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립 대신 '창고에 폐기물 버리고 먹튀' >(1/17)에서는 진화하는 범죄 유형을 보도했습니다. 사례로 석달 동안만 물품을 보관하기로 하고 정식 계약을 한 후 둘째 달부터 잠적해버린 상황을 소개했는데요, 피해자가 창고를 빌려주고 받기로한 돈은 매달 천백만원에 그마저도 한달밖에 받지 못했지만, 버려진 폐기물 처리 비용은 3억6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이 개입할 수 없고 민사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에 고발해도 잠적한 일당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폐기물 먹튀 수법이 일반적인 범죄유형으로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폐기물 매립, 다른 지역에 신고하면 끝?>(1/18)에서는 재활용되는 폐기물 조차 관리 절차가 허술함을 지적했습니다. 김해 계곡 자락에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는데 땅을

파보니 주물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폐주물사가 무려 8천5백톤이나 땅을 다지는 성토재로 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요, 폐주물사보다 일반 흙 비율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재활용업체는 그 업체 소재지 관할청에 재활용 대상부지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정작 폐기물이 묻히는 지역의 관할 구청은 전달만 받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지변경 사항을 신고에서 허가받는 것으로 강화하고 부지변경 소재지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기획은 경남권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통해 불법폐기물 실태를 충실히 보도했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가 우리에게 먼 얘기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또 부실한 제도로 주택 부지에까지 과도하게 사용되는 실태를 실감하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불법 투기로 토양의 오염,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하는 보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2. 정책 변화가 ‘청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

지역청년을 위한 정책이 후퇴하는데 관심갖고 알린 보도들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정원 감축, 신규 채용 축소 우려>(1/6)은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만2천여명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산경남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고,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남 올해 감축 규모는 52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원 감축에 따라 신규채용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점인데요, 당장 지역인재만 100명 넘게 뽑은 남부발전이 지난해는 고작 2명을 뽑았다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해온 지역 대학생들은 기회자체가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채용규모는 줄더라도 지역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향을 지역청년의 입장에서 짚어보고 ‘지역인재채용 유지’ 등 보완책 마련을 지적해 눈에 띄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전세값 인상을 짚은 보도도 있었는데요

1월 11일 보도한 <입주 지연, 전세값 인상..청년 임대 기능 상실>는 부산시 청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시행사가 원자재값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전세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곳이 한곳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공사 지연으로 입주마저 늦어져 당장 갈 곳을 찾기도 막막한데, 전세값 상승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사업자측은 계약서에 보증금이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인 반면, 부산시는 이미 계약을 끝내 보증금 인상은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청년에게 싼값에 집을 공급하는게 청년임대주택인데 갑작스런 인상으로 취지를 퇴색시키는 실태를 짚었고, 정책 책임주체인 부산시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한발 더 나가 부산시의 인상 반대 입장이 입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지도 확인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고충과 피해가 더 큰데요. 언론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문제점, 보완해야 할 점에 관심갖고 보도해 눈에 띄었고 계속해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아쉬운 보도>

1. 신년기획 보다 다양한 지역현안과 의제 반영했다라면

KNN은 1월 1일부터 '희망 2023년'이란 주제로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세 차례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안전한 식수 확보' 문제를, 두 번째 과제로 '가덕신공항/엑스포 유치'를, 끝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변화 움직임을 짚었습니다.

※관련 보도

- △1/1 <안전한 식수 확보, 부산·경남 힘 모아야>
- △1/2 <가덕신공항·엑스포 유치 새해 판가름>
- △1/3 <내년 총선 '무능 현역' 대폭 물갈이 되나?>

지난해 녹조 등 물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안전한 식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방향성이 올해 확정되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4월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시의성 있는 주제와 보도였습니다.

KNN에서 주요하게 던진 주제인 만큼 이후로도 심층적인 취재와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먼저 먹는물 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취수원 다변화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보도했는데 지난해 가장 큰 관심을 갖게 했던 녹조문제, 나아가 영남주민의 식수 원천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강조했어야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총선 관련 정치권 움직임> 관련 보도에서는 초점이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총선 공천권을 누가 갖는지, 선거구제 개정의 유불리 등 정치권 입장에서 전망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나 중대선거구제는 모두 정치개혁 방안으로 이전부터 제시되었던 제

도이기도 합니다. 승자독식이 아닌 시민,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인데 이런 설명은 없이 'PK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며 정치권 시각만 지나치게 강조한 듯 보였습니다. 유권자, 시민은 소외시키는 보도로 보였고 2023년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으로도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끝으로 새해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현안과 과제를 제시해야하지 않겠나 하는건데요. 올해 4월에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과 별개로 여전히 찬반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언론에서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3년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KNN이 보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힘써주길 당부해봅니다.